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농약산업 대응전략 설명회(Ⅲ)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 지원시책

긍정적요소 불구, 원가상승 등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커
PL대응 시스템 구축 확산위한 정책자금 등 지원대책 다양

■ 신 중 교 / 중소기업 정책총괄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제조물책임제도는 소비자(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로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

발생시 현재는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원칙에 따라 제조자 등의 고의·과실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제도가 시행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될 경우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피해배상청구가 손쉬워지고 제조물의 안전성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제조업체는 제조원가 상승, 신제품개발의 지연, 손해배상 책임 발생시 기업이미지 실추 및 고액의 손해배상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동법 시행으로 인한 제조업자 등의 경영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관련기업들이 제조물의 안전성 향상, 사용상의



주의·경고표시 개선 등 PL대응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 제정 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된 후 동 법률을 시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중소제조업체 2백71개사를 대상으로 PL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PL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13.7%에 불과하고 PL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2.9%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PL대응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PL대책 설명회 개최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PL인지도가 현저히 부족하고 PL대책추진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PL법 해설 및 PL대응 요령, PL지원시책 등을 교재로 작성, 2001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14개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결과 당초 예상보다 많은 3천여명이 참석하였다.

PL대책 교육 및 홍보지원

PL대책추진 실무 및 PL전문가 양성과

정 등 PL관련교육을 한국품질재단과 표준협회, 능률협회, 민간단체 등에서 실

시중에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교육비 부담 등으로 참석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2001년 9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안산)에 PL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2년 중에는 교육비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약 3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인 한도내에서 교육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의 중소기업이 30만개사(종업원 5인이상은 9만개사)에 달하고 있어 교육지원 등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 2002년 중 PL대응방안에 대한 홍보책자와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여 지방중소기업청과 업종단체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PL시스템구축 확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PL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1년 4월부터 중소기업청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책자금을 평가우대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있다.

제조물 안전성향상 위한 기술지원

중소제조업체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진단·지도를 신청할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농약산업 대응전략 설명회(Ⅲ)

정책자금 지원 계획

대상자금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기관	비고
구조개선자금(시설자금)	업체당 2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상환(연리 6.25%)	중진공 지역본부	PL시스템구축을 위해 생산시설개선, 시험검사설비 도입, 설계·제조기술개발, PL컨설팅 등의 용도로 신청시 지원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년상환(연리 6.25%)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	3년거치 5년상환(연리 5.5%)	각시·도	
○운전자금	업체당 3억원 이내	1년거치 2년상환(연리 5.5%)	"	

경우 2001년 1월 부터는 과제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을 통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사제품에 대한 안전성 관련 시험이나 검사를 희망할 경우 2001년 4월부터 각 지방중소기업청과 대전기술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연구장비와 인력을 통해 무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PL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민간업체에서 받을 경우 업체당 4~5천만원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2001년 4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지원팀에 PL대책 컨설팅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L단체(공제)보험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99년 8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PL사업팀)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PL단체(공제)보험은 일반PL보험(생산물보증배상책임보험)보다 20~30%정도 저

렴한 비용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에 PL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여 2001년 9월말 현재 PL단체(공제)보험 가입실적은 1백67건(약10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PL법 시행(2002. 7. 1) 후 PL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업체가 조사업체의 69.1%에 달하고 있어 향후 PL보험 가입업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PL보험 가입업체에 대한 PL관련 서비스 강화 및 PL보험의 집중적인 홍보 등을 통해 PL보험 가입을 활성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고액의 PL사고 발생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L 대책반 구성 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안전성제고 방안, PL 사고 예방 및 분쟁조정 지원방안, 제조물의 결함원인규명 지원방안 등 각종 PL지원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2001년 5월 업계 및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 또는 관계자 14명으로 PL대책반을 구성하

고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다.

PL관련 법무상담 지원

중소기업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PL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청과 법무부가 협약을 맺고 지원 중인 국제통상법률지원(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사업에서 업체당 2백만원 한도내의 상담비용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지원신청은 법무부(국제법무과 전화 02-503-9505)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국내기업간 거래상의 PL책임 문제 등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정부지원 제도가 없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전문 변호사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PL관련정보 수집·제공

중소기업들이 제조물의 결함원인을 사전에 분석·보완하는 한편 PL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의 유명 시험·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결함원인 분석·규명 가능 항목을 2001년 하반기 중 조사·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손해 보험사가 공동으로 국·내외의 PL관련 사고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이러한 PL관련정보를 중소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업종별 PL대응 표준모델 개발·보급

PL법 시행을 1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PL법 해설집 등 많은 서적이 출판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PL대책추진에 필요한 업종별 표준모델(Guide Line)은 전무한 실정이다. 시중에 몇종류의 표준모델이 유통되고는 있으나 이는 주로 외국자료를 번역한 것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실정에 부합되지 않아 혼돈을 야기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2002년부터 가전제품, 섬유·화학제품, 생활필수품 등 PL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PL대응 표준모델(Guide Line)을 개발(연구용역으로 추진)하여 동종업계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PL교육 및 지도프로그램 정비

현재 국내 PL전문기관(업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PL전문요원 양성과정 및 PL관련 지도(컨설팅) 프로그램이 기관별로 상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2001년 11월 중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중소기업 실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된 프로그램은 2002년도 정부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약정보**

